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일시: 2018년 1월 4일(목)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개요

- 일시: 2018.1. 4.(목) 10:00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진행순서

○ 개회식

- 인사말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축 사 :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의회 회장

○ 발제 및 토론

- 좌장 : 김형덕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반도평화변영연구소 소장 (1993년 탈북)
- 발표 :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군사학과/통일학 박사)(2002년 탈북)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2001년 탈북)
- 토론 :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1996년 탈북)
이동식(가명) 전 북한 고위간부 출신(2015년 탈북)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2002년 탈북)
김정미 코리안드림 탁구단 단장(2005년 탈북)

○ 폐회

- 기념촬영

목차

[발표문]

- 북한이주민의 관점에서 본 대북·통일정책-----3p
주승현 교수 (전주기전대 군사학과/통일학 박사)

- 북한이탈주민 관점에서 본 이주민정책-----15p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축사를 해주실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전주명 회장님, 사회를 진행하실 김형덕 소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주승현 박사님, 이해경 박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영희 박사님, 이동식 선생님(가명), 한용수 기관사님, 김정미 단장님 그 외 참석하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북한이주민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당내 ‘새터민’ 특위를 발족시켰고, 북한이주민이 북한을 떠나 제 3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 국내 입국 후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문제에도 많은 애정을 가져 오셨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시, 주중 한국공관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의 안전한 입국을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며 통일 이전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이주민들의 남한사회 이주정착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대북 및 이주민정책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여러분의 정책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통일, 대북 및 이주민정책에 대해 마음껏 주장을 펼치십시오. 한번 시도해서 안 되면 열 번, 그래도 어렵다면 될 때까지 도전하십시오. 민주당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장들이 정부의 관련 기관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되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회장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며 우리가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으며 첫 행사로 북한이주민 정책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염원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 여러분들과 북한이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탈북이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일 및 이주민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3만여 명이 넘어선 지금 북한이주민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이미지 또한 한결 부드러워 졌습니다.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대북·통일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탈북자들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계기를 통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탈북자 중에서도 노약자, 장애인, 미혼모, 한부모 가정을 비롯하여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주민 지원정책은 끊임없이 협의와 발전을 통하여 다듬어 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견과 방안들이 제시되어 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문①

북한이주민의 관점에서 본 대북·통일정책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 군사학과)

통일학 박사

북한이주민의 관점에서 본 대북·통일정책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 군사학과/통일학 박사)

I. 서론

지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 정책 목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남북한 화해를 떠들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나 실질적 논의는 미약해 보인다. 남북갈등에 대한 정부 및 전문가들의 진단도 매우 어설프고 미숙하기까지 하다.

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랜 분단시대에 살면서도 분단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나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분단에 대한 인식과 담론은 대체로 적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에 입각하여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규정하는데 그치거나 냉전시대 이론에 기초한 전통주의적 이해만이 풀이되어 왔다. 특히 통일의 상대인 북한주민이 갖는 분단에 대한 인식도 우리는 모른다. 둘째로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무력통일이나 합의통일, 흡수통일, 중립화 통일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 우리는 전문가 영역으로 치부해버린다. 셋째로, 통일의 상대는 북한정권 외에도 그곳 주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데서 비롯된다. 누가 뭐래도 통일은 북한의 주권자인 북한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오랫동안 그 사실을 간과해 왔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갈등해소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국민들의 역할과 과제를 포함한 합의가 대북·통일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II. 역대정부의 통일정책과 이행과정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보완·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후 진보와 보수로의 5번에 걸친 정권교체와 성격이 다른 대북정책의 추진전략 속에서도 역대 정부들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였다. 이는 민주화 이후 통일과 남북관계,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환경에 주목하여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통일의 목표와 원형을 비교적 잘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체제경쟁에 대한 자신감과 통일문제를 둘러싼 주도권에 대한 남북한의 뒤바뀐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분단이후 그리고 민주화 이전 시기의 역대정부들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며 점진적인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내세운 통일접근 방법이 군사력·경제력을 바탕으로 둔 급진적이고도 공세적인 통일전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지역을 미수복지구로 상정한 ‘북진통일정책’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북진통일론은 북한의 급진통일론에 대응한 방어적 입장에서 표출되었기에 정치적 구호로서의 상징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북진통일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총선거였는데 남북교류 추진을 공식적으로 반대함으로써 북한의 통일논의를 회피하는 소극적이고도 수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제3공화국으로 출범한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은 ‘선경제 건설 후통일 논의’였는데 이는 북한을 능가하는 힘을 배양한 후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통일역량 배양’을 정책기조로 삼은 것이다.

제4공화국에서 평화통일외교정책(1973년 6월 23일)을 선언하고 북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 접근을 시도한 것은 체제의 열세에서 벗어나 경제력 등에 있어서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한 자신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공화국시기의 통일정책은 선평화 후통일의 원칙에 기초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며 이것은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가 커지면서 통일논의나 대북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공세적인 전개가 가능한 기점이 되었다.

동서냉전의 해체와 남한의 민주화 진전 속에서 출범한 제6공화국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정책을 구체화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고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원칙으로 제시했다. 개정헌법에는 남북한의 분단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과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나섰다.

1)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채택과 ‘고장 난 비행기론’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민족 우선론’을 주창하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시도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민주화 이후의 통일담론을 주도하였고 무엇보다도 지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보완하여 1994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 우선론’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천명 속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민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은 냉온탕을 오가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는 핵 연계전략을 채택했고 북한의 수령이었던 김일성의 사망과 악화되는 경제난, 그리고 남한을 배제한 북한당국의 이른바 ‘통미봉남’의 정책 속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북한을 고장 난 비행기에 비유한 ‘북한 연착륙론’이 흘러나왔고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은 고장 난 비행기와 같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2) 김대중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과 ‘햇볕정책론’

1998년에 국민의 정부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놓지 않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으로는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핵심적 목표로 설정한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햇볕정책으로 부르게 되었다. 햇볕정책은 이습우화에 나오는 ‘나그네 외투 벗기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유된 것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립과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정책의 목표에서 김대중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에 근거를 둔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셋째, 가능한 분야부터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고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통일 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 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공동선언을 도출했으며 과거의 역대 정부에 비교하면 남북관계와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결과들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1·2차 서해교전과 미사일 및 핵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수많은 지원물자와 자금들이 핵 개발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제공되었다는 비판이다.

3)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론 계승과 평화번영 정책

2003년에 참여정부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번영 정책’을 표방했다. 통일방안은 기존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승계했다. 평화번영의 4원칙은 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등을 추진원칙으로 제시했다.¹⁾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큰 틀을 계승하면서 햇볕정책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북한핵문제 해결 노력과 남북관계의 진전의 병행추진 원칙에 따라 2005년 북한 핵 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개성공단과 제반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을 지속하면서 2007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10·4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북핵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발사(2006년 7월)와 1차 핵실험(2006년 10월)등으로 평화번영정책은 가속화되지 못했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선언도 정부 임기 말에 성사된 것으로 정권교체가 유력해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10·4선언에서 북핵문제나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논란으로 불거져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퍼주기식 햇볕정책이라는 이념공세에 시달렸다.

4)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도둑통일론’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뚜렷이 차별화되는데,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도 없다는 실용을 위한 대북정책의 슬로건인 ‘비핵·개방·3000’을 제시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정책으로 전환하면 남북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해 10년 안에 북한주민의 1인당 소득을 3천 달러에 이르게 한다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의 태도가 변화지 않음으로 남북관계의 단절을 불러왔으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한 첨예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일부에서는 경색, 대치국면의 돌파구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을 ‘친북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했다.

기존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역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했는데 3단계 통일방법에 입각한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인 통일지향보다는 대북압박 정책이나 급진적 통일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통일은 도둑처럼 올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여러 차례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제기한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핵·개방·3000’은 일찌감치 제쳐두고 흡수통일이나, 급변사태, 북한붕괴를 통한 북한체제변화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아왔다.

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7, p. 138.

5)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도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단계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특별히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한의 긴장이 강화된 시기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과거 10년의 진보정부와 5년의 보수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의 비판적 재평가와 장점들을 수용하여 남북한 간 신뢰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했다.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주창하고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통일대박론은 분단의 장기화·피로감으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과 기피론이 만연하던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일대박론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비론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는 ‘내년 통일론’은 이전 정부들의 북한붕괴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과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은 막을 내렸다.

III. 남북한 갈등구조와 다면적 실재들로서 분단

남북한의 72년의 분단은 분단에 대한 다면적인 인식을 배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분단은 다음의 다섯 가지의 기본 갈등요소를 내장內藏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에 접근하고자 한다.

분단의 첫 번째 갈등요소는 분단의 중층성이다. 중층성은 단층성의 반대되는 말로써 남과 북 사이에는 오랜 분단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표면적 분단이 중첩적으로 누적되어 분단의 중층성을 이루고 있다. 남북분단의 중층성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찾아온 한반도 분단으로 시작되고 지속된 영토적·이념적(경제적·지역적)·민족적 분단을 모두를 뜻한다. 무엇보다도 휴전선으로 갈라진 남북은 200만에 가까운 엄청난 병력과 강력한 화력으로 늘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표면으로 안고 있다.

남북한 갈등구조와 분단의 중층성

남한 : 북한	형성요소	변천과정	갈등의 수준
1945 ~ 현재	지리적(영토적)	⇔	심각
1948 ~ 현재	정치적·경제적·지역적	⇔	심각
1950 ~ 현재	민족적(심리적)	⇔	심각

먼저 분단의 직접적 출발점 이었던 지리적 분단은 해방과 함께 38도선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이념적 분단은 국토 분단의 층위에서 더욱 견고한 제도적 분단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적 분단은 경제적 분단을 함께 하며 남쪽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북한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들어서면서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분단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남쪽과 북쪽지역이라는 국토적 의미를 넘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전초기지로 냉전의 첨예한 분단지역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중층적 분단의 가장 중심적이고 비극적 분단인 민족적(심리적) 분단은 한국전쟁으로 600만의 사상자와 전쟁의 참화를 통해 등장했고 지금까지도 남북갈등의 총체로 가능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한민족의 일체감과 정체성이 파괴되고 신체와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민족적 분단은 오랜 분단세월이 더해져 이것의 해체와 해소가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 전체 인구 2000만 명 중 4~5%, 북한은 1000만 명 중 13~14%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의 직계가족만 해도 남한전체 인구의 20~25%, 북한은 50~60%로, 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²⁾ 무엇보다도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가족들의 성분을 핵심계층으로 등용 시킴으로서 현재의 북한엘리트들이 남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가진 계층으로, 남북 갈등의 원인이 한국전쟁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한국주도의 통일이 전개된다면 이들 핵심세력들에 의한 저항 또한 불가피하며 만만치 않아 보인다.

둘째로, 남북 분단사의 변천에 기인한 이중성이라 할 수 있다. 분단문제에서 이중성은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된 동서진영의 냉전 구조가 붕괴된 후에 전 세계는 탈냉전과 세계화를 목도하고 있지만 한반도는 한반도만은 여전히 냉전의 ‘섬’ 혹은 ‘고도’로 남아 있는 한반도 분단의 이중적 성격을 말한다. 냉전이 붕괴된 지 30년이 되어오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냉전적 대립과 적대적 대립의 진원지로 남아 있으며 휴전선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열전(hot war)의 무대가 되고 있다.

다음은 국내적 차원에서의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다. 1948년 각기 서로 다른 이념으로 정부를 구성한 남북한은 상호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자신이 정통성을 갖춘 국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에도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경계의 대상임을 강조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주민들은 통일의 동반

2) 국민일보: 2016/12/04, “분단 트라우마 깊은 한국, 통일이 곧 치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3020&code=23111111&cp=nv>

자이면서 북한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대상, 즉 북한에 대한 이중적 존재론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위협의 실체로의 북한과 민족으로서의 동포가 분단의 이중성으로 남북 갈등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이중적 시각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슷하다. 우리의 주민을 민족으로 보는 시각과 대한민국 정부를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세력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와 시각이 존재한다.

셋째로, 분단문제의 복합적 성격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치, 생활양식 등 전 분야에서의 이질화를 뜻하며 남북한 사이에는 끊임없는 제도적·문화적 분단이 더해졌음을 뜻한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동질성 파괴와 이질성의 전면화는 민족이라는 범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흔히 민족은 핏줄, 역사, 문화, 언어 등이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민족의 한 핏줄만 주장할 수 없는 열린 다문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우 학급 학생의 50% 이상이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다문화 가정의 늘어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문화도 한민족이라는 공익광고들은 이제 핏줄만 가지고 민족을 구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민족을 특징 짓는 다음은 역사이다. 한민족으로 같은 역사를 살아왔지만 72년의 분단으로 남북이 기록하고 바라보는 역사는 정반대이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역사관도 우리와 다르게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이를테면 북한은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대동강에서 불태운 1866년을 근대사의 기점으로, 일본 식민지 시기의 저항 조직 ‘타도제국주의’를 결성한 1926년을 현대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의 근현대와는 근원이 다른 것이다. 문화의 이질성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문화를 오랫동안 결합해 왔고 한국은 민족문화와 함께 자본주의 문화를 상당부분 수용해 왔다.

다음은 언어이다. 현재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매우 심각하며 남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상당히 달라져 있다. 오죽하면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기관을 방문하는 남쪽출신들은 하나원 직원들의 통역이 있어야 북한출신들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북한출신인 나도 실제로 최근에 입국한 함경도 출신의 고향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넷째로, 분단이 안고 있는 다면성이다. 72년간의 오랜 분단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얼굴을 분단 속에 내장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남과 북의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한국의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4조의 통일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서도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데 주지하듯 19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또한 유엔으로부터 국가의 지위가 승인되고 인정되었다. 유엔헌장 4장 1항에 따르면 오직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수성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 분단의 특수성은 국가 간의 관계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1991년 12월에 채택되고 19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데 서문에서는 남과 북의 관계를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이러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분단 상황에서 상대를 ‘외국’이 아닌 ‘민족’으로 보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동시에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부정하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단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V. 통일의 기초적 이해와 방법론

통일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통일이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 공동체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단초기부터 상당기간 통일에 대한 방법론이나 공세는 북한에서 제시되어 왔고 반대로 한국은 수동적 이었고 수세적 이었다. 그러나 체제경쟁이후 입장이 바뀌어 한국은 공세적이고 반대로 북한은 방어적이다. 통일논의와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72년의 분단시기에 남북한 모두가 통일 문제를 양 정권이 오랫동안 독점하고 통일의 주체인 양쪽 주민을 그 과정에서 소외시킨 것이다.

다음으로 여러 통일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불필요한 통일방안이나 시나리오로 통일문제를 더 어렵고 난해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관심을 저하시켜 온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차용해온 분단통일국의 통일경로와 통일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디까지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 상황에 맞는 방법과 시나리오가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분단통일국의 통일방안과 사례는 매개변수 일뿐 절대상수 일수는 없다. 문제는 한반도 상황에 따른 통일방법이나 시나리오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통일의 방식이 흡수냐 무력이나, 아니면 합의냐 신탁방식이나, 중립화냐에 따른 복잡하고 원론적인 이론만 남발했을 뿐 국민들의 참여와 지혜가 담긴 원숙한 논의나 구체적 로드맵은 부족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은 결코 미리 그려진 경로나 시나리오 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분단통일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례가 있다면 어느 국가도 공식 선언된 통일방안대로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의 상대인 북한지도체제와 북한주민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일의 상대를 북한정권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투트랙

(two-track)’ 즉 북한정권과 주민주민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통일전략이 필요하다. 통일의 궁극적 주체는 남북한 주민이다.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최종선택은 주민의 몫이다. 한국사회에서 통일론이 호응을 얻으려면 전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수이듯 북한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곳 주민들의 마음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북한이 망해도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구체적 통일방안이나 실제적 통일준비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 이전 시기의 역대정부들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며 점진적인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내세운 통일접근 방법이 군사력·경제력을 바탕으로 둔 급진적이고도 공세적인 통일전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환경에 주목하여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통일의 목표와 원형을 비교적 잘 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체제경쟁에 대한 자신감과 통일문제를 둘러싼 주도권에 대한 남북한의 뒤바뀐 양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할 통일정책의 일관성·계속성·지속성의 결여는 대한민국 통일·대북정책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항구적 초석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주도권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탈북민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도 그 정책에 당사자인 탈북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은 분단 상황의 극복이며 통일의 상대는 북한주민이다. 따라서 분단 상황에서 파생된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이 분단극복의 선결조건이자 통일의 열쇠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남북의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어 왔으며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사는 지난 72년간 적대와 증오, 원한과 분노, 왜곡과 대립으로 민족의 동질성까지도 파괴하고 이질성을 확장해 왔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해소가 없이는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은 사실상 요원해 보인다.

셋째, 다기다양한 수많은 통일논의와 통일시나리오의 현실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무력통일, 합의통일, 중립화통일, 흡수통일, 신탁후통일 등이 한반도의 통일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전쟁의 교훈은 어떤 경우라도 무력으로 인한 통일은 막아야 하며 또한 무력통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합의통일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통일은 합의에 의한 대등통일

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이 시작되는 순간 이후 통일과정은 가장 냉정하고 냉혹한 힘의 관계를 반영하며 무엇보다도 이미 남과 북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한 통일은 힘의 반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립화통일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환경을 둘러보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통일인지는 명약관화하다. 남한주도의 통일이면서도 그것을 북한주민들이 원할 때 통일은 가능하다. 통일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서독의 경우 베를린장벽이 붕괴했을 때 서독정부의 ‘선택’과 목표는 놀랍게도 동독의 붕괴가 아닌 “동독상황의 안정화”였다.

넷째, 최근 통일과 관련된 최대 관심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급변사태 가능성 여부다.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급작스러운 정권붕괴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과 분석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면 이를 통일로 봐야 할 것인가?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긴 하지만 그것이 곧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국가성을 인정받은 국가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한 다해도 다른 정치지도세력이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통일에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새로운 정치세력과 북한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통일 혹은 영구분단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통일준비의 최대과제는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주역은 동독주민들이었다. 정권에 항거하여 거리로 나서서 베를린장벽을 붕괴시켰고 투표로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여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서독에 흡수편입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어와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개정된 헌법에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적시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통일 방법론을 넘어서 북한주민들이 수용하고 남북한 구성원들 모두가 지지하는 통일의 주체(주도)³⁾, 방법, 시기, 내용을 포함하여 자격, 능력, 철학, 의지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3) 지금도 북한주민의 통일의지를 조사하면 97% 이상으로 압도적인 반면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에서는 지난 10년간 통일에 대한 지지가 90%대에서 50%대로 낮아졌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한 ‘2016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2012년에 57%로 나타났지만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53%를 기록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북한주민은 북한주도의 통일에 절대적 지지를 보이는 반면, 우리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지지마저 감소하고 ‘필요 없다’는 의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발표문②

북한이탈주민 관점에서 본 이주민정책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

북한이탈주민 관점에서 본 이주민정책

이혜경 약사⁴⁾

들어가면서

북한이주민은 1953년 7월 27일 남북 정전협정 이후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월남(越南)하는 경우(개인적 사고 또는 일부 정치적 신념에 따라)로 지속되어 왔다. 1997년 이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양산한 북한주민의 남한이주가 대량화, 상시화 되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대량탈북 20년 사이 남한 입국자 수는 2017년 12월 현재 3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후 제도와 사상을 달리하는 사회구조로 지난 70여년을 지내왔기에, 남북 주민들도 각기 다른 사회적 인간형으로 변화되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분들은 유년기에 부모에 의해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창 자라던 식물이 어느 날 기후와 환경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이식되는 식물에 비유되기도 하고, 한류(寒流)에서 자라온 물고기가 온류(溫流)로 이동하여 살아가는 상황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사회로 이주하여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남북 통일과정 또는 통일 후 남북주민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가늠하는 제한적 시험(testa)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지난 기간 북한주민에 대해 주로 남한주민의 시각에서만 고찰·분석하여 아쉬움과 불편도 없지 않았다. 이번에 민주연구원에서 탈북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관련 정책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해 토론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1. 탈북민의 등장배경과 고찰

1) 숫자로 보는 탈북민 입국현황

90년대 북한의 대 기아사를 낳은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북한 주민의 누수(漏水)현상⁵⁾으로

4) 사단법인 새 삶 대표, 남북한 약사 1호, 통일학 박사

5) 90년대 후반기 기아사와 월경도주로 2천3백만의 북한주민이 감소하여 이를 누수현상이라고 명한다.(발제자 주)

탈북민이 등장하여, 남한 입국자 대열을 줄 잇게 하였다. 초기 탈북민들의 남한 입성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남한이라는 자유세계에 ‘망망대해의 쪽배’ 와도 같은 생명들이었다. 끊이지 않는 탈북민 대열을 의식하여, 한국은 하나원(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소)을 창설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는 등 빠르게 탈북민 보호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 입국현황(~'17.09월말 입국자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잠정)	합계
남 (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 (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78%	80%	79%	85%	71%

표] 북한이주민의 국내 입국현황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9호로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4항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에 의거해 탈북민 정착지원이 개시되고 전개되었다.

김정일 정권 상승세 ↑	김정은 정권 급감 ↓
무?의식적 탈북: 식량난, 가족 일탈, 방랑아 → 주류는 노동자, 농민 등	의식적 탈북: 체제불만, 자유세계동경 → 주류는 고위층, 사무원, 청소년, 학생, 先입국 가족결합 등

2. 탈북민 남한사회 적응의 明暗 (실패와 성공?)

대량탈북 20년 역사의 명암은 한국 사회가 북한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경단현상의 이방인으로 웃돌기만 하는 탈북민들

북한에서 이주해온 개개인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북한에서의 수십 년 경력과 학력이 무자비하게 몰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사회에 동화되려고 아등바등 노력하지만, 실제로 관련 직장이나 기관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첫째, 자격인정이 안 되는 무늬만의 학력인정

둘째,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다름으로 인식되어 부정되는 현실

셋째, 북한의 모든 경력자⁶⁾들이 몰인정(대표적으로 의사, 교사, 스포츠계 저명인사들, 외교관 출신들 등)

2) 탈북민 부적응의 사례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하는 탈북자가 해마다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⁷⁾.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은 지난 2013년 1명, 14년 2명에서 15년에 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살원인으로 남한에서의 부적응에 따른 가정문제가 3건, 재정문제와 우울증이 뒤를 이었다는 언급이 있다.

- 부적응으로 인한 재입북 사례

2017년 공개된 2인(임지현, 주영희) 포함, 7년간 총 28명이 재입북 함

- 부적응으로 인한 감옥행 등의 사례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마약 등으로 탈북민들의 징역행도 적지 않음

- 부적응으로 인해 여성 탈북민들이 퇴폐 유흥업소에 많이 노출됨

- 부적응은 여성 탈북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속에서 학업 중도포기 사례확산



3) 탈북민 남한사회 성공적 적응의 사례들

의료인력 국가고시제도는 기존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 200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재개정 이후 두 자리 숫자의 의사, 약사들이 한국에서 면허(lisence)를 취득하여, 의료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출발에 액셀(accelerater)을 밟아 나가고 있음 (비교적 긍정적 면)

서울대 의대 신희영 교수는 2016년 청진 의대생 2인이 서울대생과 함께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북한 청진 의대생의 실력이 서울대 의대생에 못지 않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였음 (2016.12.21 통일의료학회)

2016년 4월 하나원을 퇴소한 김모 의사는 6개월 의사국가고시 공부 후 1회차에 합격하여, 현재 고려대에서 인턴과정을 수료중임. 이는 북한인들에게도 한국인들과 동등한 기회를 주고, 동등한 활동영역 하에서 동등한 실력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효력(effect)이다.

6) 사례1: 2016.8.14. 산부인과 의사의 죽음: 고층 유리 창닫기 작업 중 추락사고, 2016년 현재 90명 응시 중 24명 면허시험 합격: 16년 신희영 자료

사례2: 중앙당38호실 고위관리 이정덕 14년 귀순 16년 美재망명

7) http://www.ytn.co.kr/_ln/0101_201609221813117093

4) 그외 긍정적 정착모습들 다수

- 현대 모비스에 입사한 장모씨는 2001년 북한의 김책공업대학 전자공학부 졸업 후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여, 한양대 전자공학부 수학 후 현대모비스의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10년간 근무, 현재는 해외공장 관리자로 자리매김 함
- 강서구의 이모씨는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 출신으로 부동산학을 공부한 후 공인중개사로 활동. 주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 Top의 지위에 서게 됨
- 임모씨는 북한의 리과대학을 졸업하고 탈북하여, 중국인 신분으로 일본의 게이오대학을 수석으로 졸업. 이후 국내 입국하여 북한 신분을 회복, 현재는 한국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하여 일본회사의 중견관리로 박사학위에 매진하는 있음
- 경기도 남부의 차판매 왕으로 연봉 1억을 훨씬 웃도는 김모씨 사례
- 서울과 수도권 내에 북한 출신 한의사가 개업한 한의원만 10여개로, 현재 아무 문제없이 영업과 진료활동을 원만히 하고 있음. 특히 시청역 인근에서 모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암 치료로 특수하여 전국 각지에서 내방하여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음
- 학계의 탈북민 수용과 영입은 선도적이어서, 탈북민 출신 대학졸업자의 한국 내 박사 학위자가 20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진로⁸⁾에서 뚜렷한 개진은 전무한 상태

3. In vitro, In vivo(시험관내, 생체내)

1) In vitro, In vivo

의학에서 In vitro는 시험관 실험으로 발제자는 탈북민의 한국사회 영입과 적응을 시험관 실험에 비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시험관실험에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date)를 얻어야 곧 생체내(生體內), 생동실험에 착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생동실험이 성공하면 곧 약품(drug)이나 상품(product)으로 허가된다. 이를 남북통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실험관 실험의 성공을 위해 용액의 액성(PH), 온도(T), 성분(C), 등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식물의 3대 요소(빛, 공기, 물)가 필수조건 이듯이. 하물며 탈북민은 태를 묻고 자란 환경과 조건이 상이한데서 옮겨온 뿌리 잘린 식물이다. 이 식물들은 분명한 모살이(뿌리가 다 타죽는 힘겨움을 견뎌내는 인내)를 견뎌내야 드디어 원만하게 뿌리를 내리고, 잎을 싱싱하게 줄기와 뿌리를 뺄 수 있다.

탈북민도 마찬가지로 원리로 생각하고 보듬어주고 지켜봐주고 때론 태교음악과 같은 클래식도 틀어주면서 우량적인 생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의 탈북민 보호 및 정착정책은 1990년 후반기부터 지속적이고도 부단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보여진다.

2) 탈북민 정착 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 정책변화의 고찰⁹⁾

8) 대부분의 박사학위자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떠다님. 통일 관련 분야에서도 한국인들과의 경쟁에서 인맥, 연줄, 학연 등의 부재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사정이며 NGO 단체장이 고작임.

9) 통일부 탈북민정책 의견수렴 세미나 박현선 교수 발제문(17.12.6)발췌

① 보호 및 지원(1997~ 탈북민 900여명)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7년)하여 탈북민 지원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② 자립 및 자활(2005~ 탈북민 1300여명)

지원체계를 보호에서 자활로 전환: 정착지원금을 축소(2,800→1,000 만원)하고, 현금·직접지원에서 인센티브·분할지원으로 변경하며, 취업과 연계한 장려금 제도 도입(최대 1,540만원 지원)

이의 부작용으로 일부 탈북민들은 자격증 인센티브에 몰입. 20대 청장년들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음.

*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등 정착지원 기반 확충(2009~2012)

- 거주지 적응 지원을 위한 하나센터 지정·운영(2009.3)
- 탈북민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2010.11)
- 탈북민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제2하나원 개원(2012.5)

* 탈북민 맞춤형 지원 확대(2014~)

- 미래행복통장 도입, 탈북청소년 교육 및 탈북여성 취업 지원 강화

③ 사회통합(2016~ 탈북민 3만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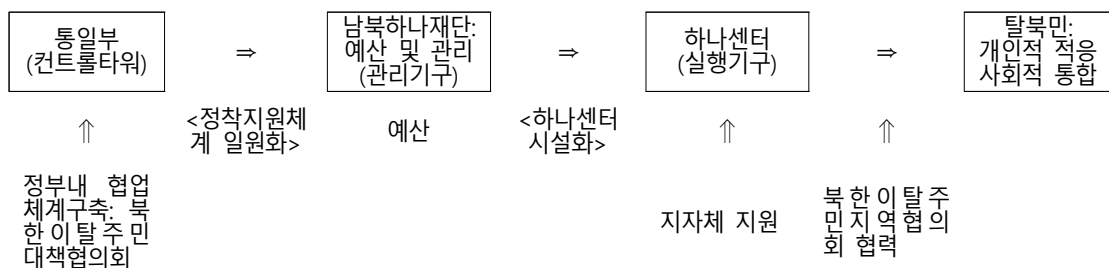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통일준비 차원에서 한국사회 포용력과 탈북민의 소속감 제고

④ 생활밀착(2017~ 탈북민 3만여 명)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탈북민의 자립·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 사회 통합 실현한다는 내용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

* 탈북민을 두고 보호 및 지원에서, 자립 자활로, 또 사회통합형으

로, 이번에는 또 생활밀착형... 앞으로 또 어떤 수십 가지의 수식 가? 이러한 새로운 신생 문구와 언어들로 단정 지으며 탈북자 집단과 개인을 장애인화



<그림> 사회통합형 정책의 집행 과정

위와 같이 탈북민 3만명을 위하여 수많은 기구와 부서들이 산재하고, 문어발식으로 비대한 탈북자 지원정착을 목표로 하는 상설·비상설기구들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비대한 기구나 전시(展示)적인 메커니즘들이 탈북자 본인들에게는 안겨오지 않는 ‘몽골해군’을 방불케 한다. 오시(Ossi) 베시(Wessi)론이 지배적이었던 통독과정을 추월하는 인식과 이해의 편견과 소외이다.

2016.10.19(수)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 임직원 및 전문상담사 현황

□ 남북하나재단 임직원 현황('16.10.14 기준)

구분	계	이재창 사무총장	1급	2급	3급	4급	5급	무기직	기간제
정원	52	1	1	5	7	14	19	5	—
현원	56	1	1	4	6	11(2)	23(7)	5(1)	5(1)

* ()는 탈북민 직원 수
* 재단 임직원 중 북한이탈주민은 총 11명으로 전체 인원의 19.6% (인턴 제외)

□ 전문상담사 인력 운영현황('16.10.19 기준)

○ 인력현황

종원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휴직자	단속근로자
85명	69명(14명)	21명(1명)	2명	2명

* ()는 탈북민 전문상담사 수

○ 기관별 배치 현황

구분	성별		출신별		소계
	남	여	남한	북한	
하나센터	8	97	63	12	75
24시 콜센터	1	4	4	1	5
정확지원과	0	1	1	0	1
통일부	0	1	0	1	1
남북하나재단	1	2	2	1	3
수도권심리안정지원센터	1	2	3	0	3
한겨레중고등학교	0	1	1	0	1
전 계	11	78	74	15	89

작성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팀 대리 : 최찬희 연락처: 3215-5715
운영팀 사원 : 한지혜 연락처: 3215-5726

○ 2016년 8월 현재 통일부 및 산하기관의 탈북민 고용 현황

- 성명, 현재나이, 성별, 채용시기, 고용형태, 현재직급, 부서, 담당업무, 연봉

○ 통일부 및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민 고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통일부 탈북민 고용현황> ('16.8.기준)

고용형태	탈북민(명)	비고(직위)
정규직	6	7급: 2명 9급: 4명
임기제	2	4급상당: 1명 6급: 1명
합계	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민 고용현황> ('16.8.기준)

고용형태	탈북민(명)	비고(직위)
정규직	9	4급: 2명 5급: 7명
계약직	1	무기계약직: 1명
인원	2	
합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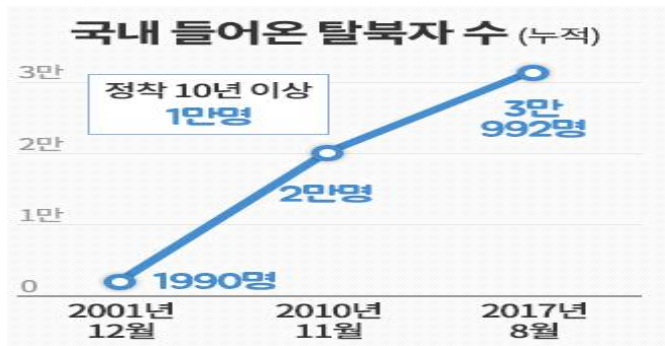
3) 탈북민을 위한 마당(matrix) 마련

통일마중물로서 기관들에서부터 탈북민들을 대거 채용하는 기조를 마련해야 함. 2013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100여명의 전문상담사제도 도입을 계기로 탈북민 채용이 늘어났지만, 2016년 10월 기준으로 2,3급은 전무하고 4급 2명, 5급 7명, 무기직 1명이 고작인데 탈북민 채용을 활성화한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통일부도 마찬가지다. 정부청사 7층 통일부에 세자리 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탈북민은 고작 다섯 손가락 내에 불과한 것이 오늘 탈북민의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탈북민들은 홀대받고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오늘 현주소이다.

관에 이어 민에서도 소외인식은 여전하다. 한국에는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여성 자녀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한국어 교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비롯한 탈북 학생 학교들에서는 중국어가 능통한 한국인만 채용하고, 중국어가 능통한 북한 교사자격을 갖춘 탈북민들은 채용하지 않는다. 북한 학생들의 남한화(同化)에 한국인들만으로는 역부족인

사업들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림] 국내 입국한 누적 탈북자 수

이는 마치 탈북민은 헤드(head)급이 될 수 없는 저능아라는 인식 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적 관념하의 탈북자 정책은 10년, 100년이 가도 성공할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이다. 이에 등대론과 생모이론을 언급하고 싶다.

등대론	北	남조선에 가면 잘살 뿐 아니라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조명철효과: 48명의 고위급 귀순, 3만명 중 2만명이 가족,친지와 전화정보교환 등)
	南	우리 北출신도 저렇게? 그럼 나도 비록 어렵지만 선배처럼 되고 싶어: 동기부여(좌절과 비관탈피 학습효과)

○ 등대론 도입이 중요하다.

탈북민들을 관이나 부처들에 과감하게 채용하여 활용하는 혁신을 도입하지 않으면, 탈북민 정책은 늘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등대효과는 탈북민 뿐 아니라 북한주민에게도 주는 효과가 지대하다. 현재 북한 주민에게 비취진 탈북민 상은, 한국에서 소외되고 편견에 찌들어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지배적이다. 이런 변수가 2011년 이후 탈북자 입국자수 감소(남조선에서 북 출신들이 엄청 무시당하고 고생多)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생모이론 역시 중요하다.

계모자식은 ‘사탕 가지고 쫓아가도 도망’ 가지만, 생모자식은 ‘몽둥이로 때려도 치마폭에 감싸든다’ 는 속담이 있듯이, 탈북민 정책에서 소액으로 고효율을 획득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계모는 이북자식을 의심만 하지만, 생모는 못해도 믿어주고 기다려준다. 이런 맥락에서 자식 또한 믿어주는 엄마를 거스르지 않고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원리대입으로 탈북민 정착문제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나 국가, 국민이 믿지 않고 북한 = 핵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몽둥그려 부정적인 편견에 매몰되어 있기에, 개개인들의 긍정효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사정이다.

○ 멘토링을 통한 동기부여와 참여의지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의 멘토를 한국인만으로 하려는 편향을 배제, 동료출신으로 멘토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2016~17, 사단법인 ‘새 삶’의 경험)

10년 이상 된 탈북민들이 1만명을 넘어섰는데, 다 같은 탈북민으로 치부하여 선후배 개념을 무너뜨려 다 같이 수혜자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부작용이 정착에서의 걸림돌로 된다.

성공적인 선배들을 초기 정착자들의 좌충우돌(左衝右突)과 시행착오(試行錯誤) 과정에서의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 역시 효율적일 것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피그말리온(Pigmalion effect)효과와 시너지(Sinerge)효과의 창출이다. 탈북민 정착문제에서 선후배 멘토링과 피그말리온 효과를 배합한 탈북민 정착정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심화해야 할 것이다.

○ 인정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교육과 학술연구 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교육의 콘텐츠 이해나 인정을 비롯하여, 전문(의사, 교사 등)교육을 받은 전문가 그룹 또한 일괄적으로 봉제나 요리 등으로 하나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리고자 하는 경향을 극복(하나원 교육부터)하여야 한다. 이들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급조된 사회이전(족단(族斷), 경단(經斷)현상의 고민과 죄의감 등)으로 혼란과 불안한 상태이다. 이런 그룹에 과잉교육(남한화)을 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하나원 교육이 차별한 트라우마 힐링에 주력해야 함을 권면하고 싶다. 탈북민이 초기 한국에 입국하여 받는 하나원 정착교육 요강에도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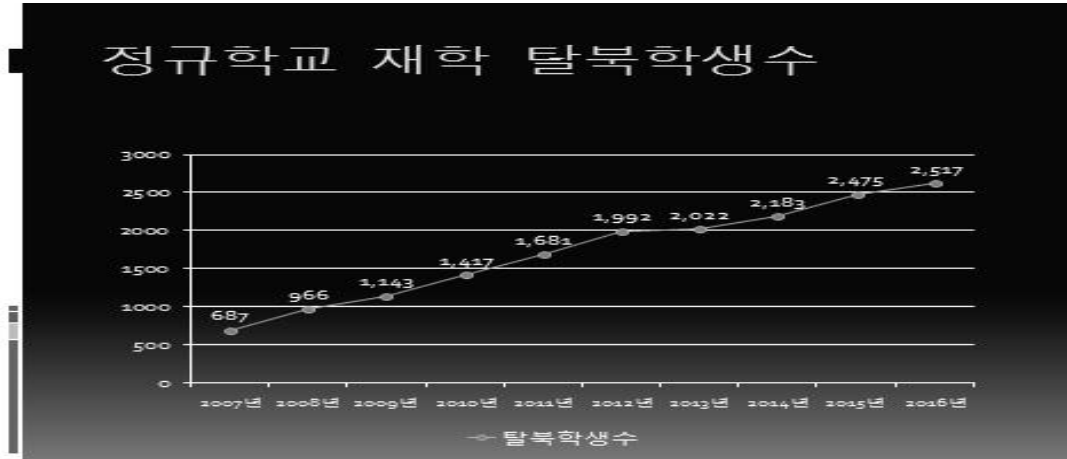
○ 기초생활수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자발적인 진로개척 기회 여건 마련해야 한다.

탈북민은 6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데, 이 기간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기간이므로 연장이 절실하다. 개인별 자립·자활 사례관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충분히 자신의 적성과 진로개척기간을 보장해야하며, 이 기간을 한국사회를 학습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통일부는 이 기간에 단순히 취업을 강조하면서 과속을 요하지만, 탈북민의 인력을 제3국의 생산인력으로 인식하는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기간에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교육과 힐링을 통하여 개인 스스로가 통일소명의 의미 있는 자신의 진로 개척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센터나 하나재단을 통한 취업통계 일면으로 몰아치는 경향성을 극복하여, 현재의 분절적 취업지원구조를 생활주기별로 연계된 자발적인 취업·창업 사례관리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민의 원활한 남한사회 정착이 곧 북한주민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얻는 유일한 창이 된다. 당면하게 탈북민들에게 해외여행 패키지 지원도 긍정효과의 원천이 된다. 서독은 동독이주민에 대해 기존의 난민수용 정책에서 70년대(20만명 중 노동인구가 46%) 인적자본 활용정책으로 변화. “독일난민 50% 5년 후에 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보고

(2017.04)가 있다.

4) 탈북학생들의 학업극복 사업



그림] 일반학교 탈북학생 증가 수(출처: '탈북학생 교육지원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지수 2017.12.6.)

탈북학생의 일반학교 재학률은 차츰 증가세이다. 그러나 일반학교들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인식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안기기도 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 우선 한국학교의 통일 교육부터 선행
학교들에서 탈북학생들 왕따현상 등 (현재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로 인한 긍정효과 現)
-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현장지원 강화
- 학부모 교육에도 관심 돌려야 함
- 대학생들 속에 탈북 선후배 간 멘토링 활성화 (사단법인 새삶의 2016~17 멘토링 과정은 매우 효험적이었음)
- 지방 대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검토가 필요함

4. 혁신적인 탈북민정착과 통일한국지향을 위한 사업

1) 北, 탈북민 관련 사업에 북한이주민 참여의 중요성

2015년 하나재단의 연구용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의 심사에 참석하여, “왜 연구진에 탈북민이 배석 안 되었냐?”는 문의에, “탈북민이 참여하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은바가 있다. 그래서 “세계은행총재도 한인이고, UN사무총장도 한인인데 한국으로 기울어졌냐? 그런 억측에 의한 편견은 최소한 가지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 북한연구와 탈북민 관련 학술연구에서 현실체험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자가 되도록 협조하고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 속에 간염,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자가 많다는 자료는 지적하면서도, 그 원인제공이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아비규환의 전염병 사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¹⁰⁾한 현실(15년, 17년 하나재단에 연구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캔슬된 사례: 북한의 전염병 현실에 대한 몰이해와 문제의식이 전무)

또한 북한의 관광자원과 광물자원 등 개발자원 연구에서의 탈북민 입지가 드문 현상인 바, 현재 북한이나 탈북민 연구의 주체가 대부분 한국 연구자들로 편향되어 있음. 하나재단의 연구물들을 분석하면 탈북민의 생계나 취업, 그리고 청소년 학업 등에 여러 가지 표현을 바꾼 연구물의 대부분이 유명대학, 학자 위주의 시각에서 연구된 결과물(북한이 없는 북한연구)이다.

2) 탈북민 모임의 활성화가 통일사업의 지대한 역할

구정이나 추석 등 북한이주민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다. 따라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을 가진 이주민들끼리 모여, 남한사회에서 겪는 고충과 고향소식,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탈북민 단체의 모임들을 관련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효율적인 통일비용)가 있다.

3) 탈북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개선 교육 필요

독일통일 과정의 중요 교훈 중의 하나인 민주시민교육은 탈북민의 변화만을 고집하는 기존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요소가 된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들의 일반학교 ‘왕따’ 현상 금지와 근로현장에서의 ‘왕따’와 같은 편견을 순화시켜야 한다.

4) 탈북민을 북한개전(development)의 메신저로 성장시킬 필요

탈북민 사업은 한국사회의 블루오션(Blue Ocean)이다. 통일한국을 지향할 때 남과 북 양측의 문화를 경험한 선구자, 유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자들은 통일의 자산(資産)임이 분명하다. 또한 탈북민은 각 지역의 문화자산과 자원을 소지한 통일자원¹¹⁾이다. 이들을 통일 후 매니저먼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5) 탈북자 北송금과 지원 대책

현재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을 부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년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1,000여만 원을 송금해 주는데, 이들은 초기 기초생계비를 짜 모아 마련하여 북송해준다. 국가보위성의 한 간부는 “탈북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외화가 북한을 먹여 살리고 있다”며 “요새는 탈북자들이 애국자” 라고 말한 것¹²⁾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남북은 정서적 문화적 교류와 소통의 과정을 겪게 되므로 이는 단순 송금사실

10) 중앙일보, 27cm기생충, 북한 의료현실 연구해야 (17.12.13, 이해경)

11) 북한출신은 북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구성 및 생태계에 정통하므로 개발과 발전사업의 책임자이다.

12) TV조선17.5.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8&aid=0000211401>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명 당 평균 210만원(7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액수 해당), 2000년 초기에 이산가족 상봉자금으로 80만원 이상(서류와 대상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받았던 기존 시스템을 부활시켜 입국 3년차에 제한하여 지원 대책 긍정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北가족에 돈 보내는 탈북자 63% 출처: 2016.1.1. TV조선

6) in vivo (남북 간 Gap 좁히다: 구심력↑)

북한주민들에게 中보다 남조선이 더 마음에 와 닿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먼저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먼저 초기 적응시간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와 가우크 대통령(11대:2012.~17.3)을 탄생시킨 통독(동:서독 인구 4배→북:남 인구 2배)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자세 가 필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배출 등 국정원을 비롯한 통일부, 통일교육원, 하나원, 하나재단 등과 언론사, 공관장(하나원, 하나재단) 등 북한 관련 각 영역에 북한 출신들을 대거 채용하여, 그들을 활용하고 참여공간을 마련¹³⁾해줄 필요가 있다.

13) 새 정부의 공무원 수 9000여명 증원시, 그 1%에 해당하는 90명을 탈북민으로 채용 (통일시 북한지방 지자체 공무원 준비차원 등)한다면 커다란 자긍과 소명감을 줄 것임.